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15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7월 8일 수요일(음력 5월 18일)

제주도민 삶·여건 갈수록 '팍팍'

부동산 열풍에 재산세 부담 5년새 갑절 증가
핵심세원인 취득·레저세는 2년전부터 감소
도 재정자립도 2018년부터 3년 연속 하락세

최근 몇년새 불어닥친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도민들의 재산세 납부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는 취득세는 2년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도내 재산세 징수액은 2014년 840억7500만원에서 2015년 935억6300만원, 2016년 1103억900만원, 2017년 1318억6800만원, 2018년 1504억4400만원, 2019년엔 1708억1400만원으로 5년새 갑절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3~5배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도내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2015년 12.35%(전국 4.63%), 2016년 27.77%(전국 5.08%), 2017년 19.00%(전국 5.34%), 2018년 17.51%(전국 6.28%), 2019년 10.70%(전국 8.03%)를 보였다.

이에 반해 부동산 거래세로 불리는 제주지역 취득세는 2014년 3199억원에서 2015년 4439억원, 2016년 5215억원, 2017년 549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부동산 투기열풍이 사그라들면서 2018년 5378억원으로 줄었고 이어 2019년엔 4785억원으로 감소했다. 레저세도 2017년 680억원에서 2018년 628억원으로 줄었고, 2019년엔 626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제주지역 전자담배 수요증가로 인해 담배소비세도 감소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2014년 435억원에서 2015년 466억원, 2016년 608억원, 2017년 628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가 전자담배 수요가 늘면서 2018년엔 594억원, 2019년에는 570억원으로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4년 29.6%에서 2015년 29.9%, 2016년 31.2%, 2017년 33.7% 2018년 34.5%로 매년 상승해 오다가 2019년 33%로 줄어든후 2020년엔 다시 32.9%로 하락했다.

제주자치도는 세수 충당을 위해 앞으로 도내 투자진흥지구의 세금 감면 비율을 줄이고 목욕탕 등 기타 용수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도민들과 투자자들이 세부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마 미시행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와 리스차량 등록업체 유치 등 역외세원 확충 등으로 다행히 현재까지는 전년대비 플러스 상황"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고사리손 잡고… 호기심 가득 원아들의 나들이 7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연화못에 현장학습을 나온 어린이집 원아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연못을 바라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4·3 완전해결 위한 특별법 개정안 내주 발의

오늘 제주 토론회 후 보완
배·보상 근거조항 등 제시
군사재판 무효화도 담길듯
법제실 검토 거쳐 제출키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주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7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준비를 이번 주 중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공동발의에 나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립한 초안에 대해 유족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8일 제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한 차례 더 의견을 듣고 개정안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를 거치면 다음주쯤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는 배·보상 근거조항과 기준 제시, 군사재판 무효화와 일반재판 범죄기록 삭제, 진상조사활동 국회보고 의무화 조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4·3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한국전쟁 중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 관행과 동일한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확정되는 개정안은 초안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선에서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법 개정 논의 과정에 탄력을 얻을 수 있도록 20대 국회 당시 공동발의자(60여명) 수준으로 여당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에도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냈지만 결국 폐기되는 것을 지켜본 오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국립공원 확대 논의 재개 촉각

연기됐던 환경부 공청회 오는 9~10월 개최 전망

잠정 중단된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논의에 재시동이 걸릴 모양새다. 그동안 불거진 갈등이 봉합돼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올해 안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됐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오는 9~10월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당초 올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추진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성사되지 못했다.

여전히 코로나19 변수는 있지만 도는 "더이상 늦출 수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올 하반기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 지정·고시까지 '연내 매듭'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경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수도, 축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확대 지정을 건의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공원 구역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에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포함해 현재의 약 4배 가량 확대된 총 610㎢ 규모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임·어업인들이 생산활동 제약 및 규제강화 우려와 사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발하면서 공청회 등 각종 행정 절차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후 도는 국립공원 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자·우도 주민, 임업인 등 이해당사자 대상 간담회 등 소통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갈등관리 권고안 도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이달 중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도민토론회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권고안 도출이 늦춰졌지만 지난달 말 회의가 재개되면서 사회협약위가 재가동됐다.

도는 향후 추진될 주민공청회 후 사회협약위의 권고안 등을 반영해 도의 공식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알 림
뉴스를 활용한 인성교육
"학교를 찾아갑니다"
대상 학교 및 교육기관 모집
▶사 업 명: 2020 뉴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인성교육
▶사업 대상: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7곳
▶사업 형태: 특강+NIE 체험
(1곳당 2학급(또는 동아리), 각 연속 2시간)
▶사업 기간: 2020년 7월 20일~12월 18일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선착순
한라일보 홈페이지(http://www.ihalla.com)
좌측 배너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ejoh@ihalla.com)로 전송
▶문 의: 010-2024-5692(NIE 담당 기자)